

초대특별시장 경선 '5인 결선·시민배심원·권역순회' 가닥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방식은

민주 공관위, 인구규모·권리당원수 고려 절충안 마련 후보군 8명 전원 본선행...예비경선 후 상위 5인 압축 광주전남 통합 취지 반영...4월 셋째주 최종 후보 확정



김기정 김영록 민형배 신정훈 주철현 이개호 정준호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선출 방식을 5인 결선과 시민공천 배심원제, 권역별 순회경선으로 치르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에 제안했다.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경선 과정부터 '통합 정신'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8인 예비경선 후 5인 본경선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광주·전남 서부·동부권 순회경선을 핵심으로 하는 경선 틀을 최고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공관위는 공천을 신청한 8명을 모두 적격자로 판단하고 컷오프 없이 예비경선에 진출시키기로 했다. 광주권 후보로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기정 후보, 재선 국회의원 민형배 후보,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이병훈 후보, 청년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정준호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전남권에서는 8년간 도정을 이끈 김영록 후보, 도의원 출신 3선 국회의원 신정훈 후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4선

이개호 후보, 여수시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을 지낸 주철현 후보가 포함됐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합동토론회를 거쳐 상위 5인으로 압축한 뒤, 본경선에서는 당헌·당규에 따른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포함해 순회투표를 실시하지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예비경선 세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 권리당원 투표 또는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를 적용하는 기존 표준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본경선에선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권역

별 순회경선이 새롭게 도입된다. 사표를 줄이기 위한 선호도 투표, 이른바 호선 방식 채택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광주·전남이 하나의 통합자치단체로 출범하는 만큼,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시·도민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통합 비전을 공유하도록 설계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예비경선과 본경선 일정에 대해 "결선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3월 20일 전에 완료하되 경기, 전남광주 이런 순서로 경선이 잡힐 것"이라며 "서울은 가장 늦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오는 20일 전까지 마무리하려면 최소 3일 마다 권역별로 순회하며 경선을 치러야 한다. 후보들은 물론이고 경선 관리자들에게도 꽤 촉박한 일정이다. 게다가 본경선에서 과반을 얻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결선까지 치러야 한다. 이 같은 경선안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절충안이다. 광주(120만명)와 전남(156만명)의 인구 규모, 권리당원 수(광주 13만명·전남 18만명)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 단일 방식 적용 시 특정 지

역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주권 정부 기초와 당원 중심 원칙을 동시에 고려한 타협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최종 후보는 서울시장·경기지사 후보 확정에 앞서 4월 셋째주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수장을 뽑는 만큼, 경선 과정 자체가 통합의 시한대가 될 전망이다. 이철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부청사 전경.

통합특별시 주청사 '동상이몽'...사안마다 갈등 요인 산재

광주전남이 하나로 뭉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여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모의 경제, 파격적인 정부 지원 등 대의를 내세운 선 통합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이 국회 통과와는 성과까지 냈으나 묻어뒀던 현실적인 문제들은 하나둘씩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주청사 위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특별시장, 공무원들의 근무지를 넘어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품은 사안이다. 특별법에서 통합 특별시 청사는 순천에 있는 전남도 동부청사, 무안청사(기존 전남도청), 광주청사(기존 광주시청)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특별법 제정 등 통합 절차에 걸림돌이 될 논쟁을 피하려는 공간 아래 정치권 안팎에서 주청사 언급을 암묵적으로 자제해 왔다.

초대 특별시장 후보군 다수도 '균형 운영' 합의를 강조하며 논란을 피해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민형배 의원은 당선 시 6개월간 순환 근무 후 주청사를 결정하겠다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순환 근무 원칙에 따라 첫 출근을 동부청사로 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여수가 지역구인 주철현 의원은 광주로의 집중, '블랙홀 현상'을 우려하며 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풀어야 할 과제는

광주권·전남 동·서부권 등 3개 권역 이해관계 대립 첨단산업·공공기관 유치 경쟁도 '권역간 갈등' 우려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구 불균형 해소도 숙제

청사를 전남에 둘 것을 주장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은 "주소 제지 결정은 당선될 통합시장에 미흡사안이다"며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합 시장 취임식 장소와 핵심 의제·발전 전략을 세 그 중 한 곳에서 주로 수립할 경우 주청사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만큼, 풀어야 할 당위의 과제이다. 주청사 위치는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의 일대 전기가 될 수 있지만, 남은 청사는 출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퍼졌다. 지역 쇠락과도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특별시 출범에 따라 지방의회, 교육청, 경찰청, 법원, 검찰 등 중앙·지방 공공기관 조직 체계 변화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 요인이 발생한다면 주청사 위치는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쟁이 불가피하다. 사안마다 일어날 수 있는 권역·소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해야만 특별시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전남 22개 시·군, 광주 5개 구의 기능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로 지목된다.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 행정·재정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동등한 지위에 올려야 한다. 통합에 필연적인 공공 조직의 변화 과정에서 마찰음도 예상된다. 특별법에서는 통합 특별시 설치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통합으로 초과하는 정원은 정원 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본인 동의 없이 기존 시도 경계를 초월한 근무 발령,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통합의 실효성을 누리려면 시기의 문제지 조직 축소, 교차 근무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조직의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 간 인사이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별법에서도 통합으로 초과하는 공무원 정원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

교육공무원 5만3300명 '화학 결합' 통합특별교부금 등 재정 확보 관건

교육감 권한 견제 기구 설치 지방채 발행 권한 이양 요구 '근무지 그대로' 조정 여지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으로 통합 출범한다. 특별시교육청의 안착과 성공은 교육공무원 5만3300여 명의 화학적 결합과 인구 320만명 초광역도시의 다양한 교육 수요, 교육재정 확보 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고,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이 출범한다. 기존 시·도교육청은 폐지된다. 행정통합이 불가 2개월여 만에 속도전 속이 이뤄지면서 내재하고 있는 교육 쟁점들이 이제부터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다. 양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5만3300여 명의 화학적 결합이 최우선 과제다. 특별법이 기존 공무원들의 근무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교육 정책과 여건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 대도시권인 광주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다수일 수 있어 전남지역 22개 시·군,

도시지역 발령 등 조직 구성과 인사, 승진 등의 문제는 가장 민감한 뇌관이다. 특별법 공청회와 토론회 과정에서도 양 지역 교육공무원들의 관심사는 주 청사 위치, 조직 구성, 승진 체계, 학군 변경 등 근무 여건에 따른 이해관계 변화였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교육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점은 교육자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다. 안정적인 재원 없이는 통합의 효과가 분산될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정책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는 기관 재배치, 정보시스템 통합, 학생 교육복지 확대, 특수목적 설립,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문 인재 양성 등 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지방세법에 따른 세목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지방교육세인 법정전입금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정통합의 기본 취지인 지역소멸 극복과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확대, 고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 지방채 발행 권한 이양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비대해진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적절하게 견제하기 위한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와 교육의회 구성, 지역 교육장 직선제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광주시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전경.